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제주4.3담론 재구성 과정에 관한 연구

외적요인을 중심으로



2018년 12월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서민규

제주4.3담론 재구성 과정에 관한 연구

외적요인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류 석 진

이 논문을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 치 외 교 학 과

서 민 규



논문인준서

서민규의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12월 17일

주심 김 종 철 인

부심 류 석 진 인

부심 김 영 수 인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기존연구검토	3
제3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12
제2장 이론적 논의	14
제1절 기억의 사회적 틀	17
제2절 독일과 일본의 사례	21
제3장 외적요인 1: 정치사회적 요인	25
제1절 냉전반공체제의 형성과 지속	26
제2절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기억투쟁	29
제4장 외적요인 2: 정치경제적 요인	39
제1절 복합적 위기의 중첩	40
제2절 위기의 타개책: ‘세계 평화의 섬’ 구상과 4.3	44
제3절 포섭된 기억과 그 결과	48
제5장 결론의 대신하여	52
【참고문헌】	54



제주4.3 담론 재구성 과정에 관한 연구: 외적요인을 중심으로

이 글은 제주4.3의 담론 재구성 과정을 주목하고, 4.3의 담론이 어떠한 외적요인에 의해 재구성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0년 전 제주도에서 발생한 4.3은 반복되는 정치적 변동 속에 폭동, 항쟁, 학살 등으로 담론의 부침을 거듭해왔고, 오늘날 정치적으로 '제주4.3사건'으로 합의된 상태에 머물러있다. 그렇다면 4.3의 담론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재구성되어 왔으며, 학살론을 바탕으로 '사건'으로 합의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제주 4.3의 담론이 재구성되는 과정에 영향을 외적요인을 정치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정치사회적 요인은 냉전반공체제의 형성과 민주화라는 정치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4.3의 담론이 각각 폭동론과 항쟁론이 재현시키는 주요한 배경이었다. 하지만 정치사회적 요인은 폭동론과 항쟁론이 공식담론화와 재현은 설명할 수 있었지만, 학살론의 주목과 공식담론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경시되어온 경제적 요인을 통하여 학살론으로 합의가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4.3논의를 두고 폭동론과 항쟁론을 중심으로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던 당시, 경제적으로는 제주도는 세계화와 농산물시장 개방이라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는 위기의 타개책으로 '평화의 섬'이라는 개발 모델을 구상을 고안해낸다. 하지만 평화의 섬이라는 구상은 불분명한 실체로 인해 국내외



적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기억들을 동원하여 평화의 섬 구상을 완성해나간다. 이 과정에서 4.3은 제주도민의 억압과 수난의 상징으로써 평화의 섬 구상에 동원된다. 4.3이 평화의 섬 구상에 포섭됨에 따라 이후 진행된 4.3의 진상규명작업과 진상보고서 작성은 평화의 섬 구상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한다.

주제어: 제주4.3사건, 기억, 담론, 평화, 개발, 평화의 섬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인류는 역사적 전환기마다 과거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직면해왔다. 전환기와 맞물려 과거의 기억들은 망각되거나 때로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기를 반복하는 하나의 정치적 과정의 연속상에 위치해왔다. 한국 사회에서도 과거와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라는 물음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줄곧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오랜 기간 한국 사회에 드리운 냉전과 독재의 그늘은 과거의 기억들로 하여금 침묵과 망각을 강요했다.

억압과 침묵의 연속 속에 한국 사회의 민주화라는 일대의 전환은 그늘 속의 기억들의 해방을 의미했다. 민주화로 국가에 의해 억압받아온 과거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고, 민주정부라는 과거로부터의 단절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정권이 집권하면서 기억의 전쟁은 국가적 수준에서 진행된다. 해방 이후부터 제기되어 온 많은 과거사 의제들 중에서도 민주화로 형성된 기억의 전장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였던 것은 단연 독재정권에서 자행된 인권유린과 폭력문제였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일차적인 목적은 구체제를 청산함으로써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체제를 확립하고 강화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것의 성패여부가 정치적 정당성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치열한 과거와의 전쟁을 통해 새로운 정권은 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 했지만, 기억의 일상화를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그 결과를 놓고 치열한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과거사 문제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한국사회를 여전히 관통하고 있는 중대한 의제이다.

1987년 이후 수면위로 부상한 과거사 의제들 중 그 규모와 심각성 등을 고



려해봤을 때 대표적인 두 사건을 꼽자면,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광주 5.18과 제주4.3은 몇몇의 지점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먼저 두 사건 모두 고립된 공간에서 대규모의 학살을 경험했으며,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공동체의 참여와 무장투쟁을 수반했다(이성우 2011, 64). 또 광주 5.18과 제주4.3은 정치적 전환기에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공통된다. 전자의 경우 신군부의 집권 과도기에 발생했으며, 후자의 경우 미군정 하의 국가 건설기에 발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두 사건 모두 시대적 상징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두 사건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지점은 바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명칭’에 있다. 국가의 공식화된 명칭에서부터 광주5.18은 그 성격이 명확히 규정된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반면 제주4.3의 경우 사건의 성격이 나타나지 않는 중립적인 용어인 ‘사건’이라는 용어가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단순해 보이는 명칭의 차이에서부터 한국 사회에서 제주4.3이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대두되어 일정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두 사건은 왜 다른 위치에 서있는 것일까?



제2절 기존연구 검토

2003년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발간 이후 제주4.3에 대한 논의가 보다 다양한 학문 분야로 확대되어가고 있지만, 진실 알리기 차원에서 진행된 사건 중심 연구와 증언채록을 통한 구술연구가 여전히 4.3연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진상보고서 발간 이전까지의 4.3연구의 목적이 사건을 수면 위로 부상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기에 사건의 진상파악에 동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4.3의 논의가 시기별로 어떠한지 이루어져왔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4.3연구의 공백지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금까지의 4.3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4.3연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건 중심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주제별로 나누어 파악하기보다는 시기별로 어떠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4.3연구의 흐름을 보다 더 명확히 보여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4.3의 연구동향을 정리한 기존 연구자들도 주로 시기적 구분을 이용하고 있다(김종민 1999; 허호준 2013). 이 글에서도 시기적 구분을 이용하여 4.3의 기존연구를 크게 민주화 이전과 이후 그리고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이후의 시기로 나눠 기존의 주요한 연구들과 그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민주화 이전

4.3은 오랜 기간 국가에 의해 망각되어야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민주화 이전의 4.3을 다룬 연구 및 자료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현존하는 국내 자료와 연구들은 대부분 관변자료인데, 이 자료들마저도 반공선전의 성격이 짙어 객관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4.3의 발발이후 4.3을 최초로 언급한 관변 자료는 정일권·예관수가 1948년 8월 국방경비대의 교육 자료로 펴낸 『공산군의 유격전법과 경비와 토벌』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부분적으로 4.3을 다루면서, 4.3을 정치적 측면이 강한 유격전으로 파악하고 있다(정일권·예관수 1948; 허호준 2013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관변 자료들은 대부분 부분적으로 4.3을 다루거나, 폭동과 반란이라는 편향된 시각에서 4.3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관변 자료들 중에서 보다 객관적 접근을 시도하는 1973년 김점곤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점곤(1973)은 4.3폭동과 당시 남로당의 투쟁노선과의 관련성을 추적하면서 남로당 중앙당이 직접 4.3폭동을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기존의 관변 자료들의 시각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르면 “4.3폭동은 남로당의 기본조직과 제주도의 제한된 특수 환경, 그리고 미군정과 본토인, 그 중에서도 특히 경찰에 대한 경원 등의 조건과 더불어, 3.1절의 민중과 경찰과의 총격 충돌, 그리고 서북청년단 등 반공청년단에 대한 증오감정 등이 가세된 긴장상황을 효과적으로 선동, 조직, 동원하여 이를 교묘하게 남로당의 5.10 선거 반대 저지투쟁에 합치시킴으로써 폭발된 사건이었다.”(김점곤 1973, 154).

김점곤(1973)의 이러한 분석은 기존의 관변 자료들이 4.3을 부분적으로 언급하며, 폭동과 반란으로 환원시키던 흐름에서 보다 객관성을 추구하고자 한 전향적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점곤(1973)의 연구 역시 기존의 관



변 자료들과 같이 사건의 과정에서 자행된 인권유린과 대략학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화 이전의 4.3에 대한 논의는 관변자료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관변 자료에서조차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거나, 폭동과 반란이라는 성격이 규명이 전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왔다.

2.2 민주화 이후

1987년 민주화는 학술영역에서도 금지되었던 4.3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8년 박명림과 양한권의 석사학위논문은 국내 4.3연구의 시작을 알렸다. 양한권(1988)은 4.3폭동의 배경을 고찰함에 있어 그 시기를 폭동의 발발 이전까지로 한정시키고, 4.3폭동 발발 당일에 게릴라들에 의해 살포된 뼈라분석과 4.3폭동 발발 전의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요인분석 등을 통해 4.3폭동이 어떠한 배경에서 발발하였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박명림(1988)은 4.3민중항쟁이 사실왜곡문제와 1차 자료의 부족 문제로 인해 항쟁의 성격이 왜곡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4.3항쟁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중운동과 제국주의, 통일과 분단이라는 미군점령기의 3년의 보편적 모순 구조와 보편성을 분석틀로 두고 분석을 시도했다. 폭동과 항쟁이라는 각기 다른 시각에서 사건의 전개과정과 배경에 집중한 이들의 연구는 국내 4.3연구의 초석을 다졌다.

박명림(1988)과 양한권(1988)의 연구 이후 4.3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주목한 연구들이 이어졌다. 1988년 아라리연구원에서 발간한 『제주민중항쟁 I』은 4.3을 민중항쟁론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역사 이래 제주도 민중은 누구에 대항해



왔으며, 어떠한 체제와 지배착취수탈구조에 항거해 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면 싸워왔는가 하는 민중해방사의 맥락을 통해 1948년 4.3봉기를 재조명하고 있다.

1993년 제민일보 취재반이 펴낸 통권 5권에 달하는 『4.3은 말한다』는 4.3을 미군정 아래에서 우리 민족이 안고 있던 집약적 모순이 빚어 낸 역사적 사건으로 파악하고, 4.3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데올로기적 맥락이 아닌 당시 남한사회의 보편적 모순구조와 미군정의 실책 등의 구조적인 맥락에서 파악해야 함을 지적하고, 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987년 이후의 경향은 진실 알리기 차원에서의 사건사 연구 외에도, 구술증언채록 작업도 두드러졌다. 1988년 오성찬의 『한라의 통곡소리』와 1989년 발간된 제주4.3연구소의 『이제사말함수다』는 대표적인 구술증언 자료집이다. 오성찬(1988)은 4.3에 대한 성격규명을 보류하고, 그 중간적 과정으로서 좌우익에 의한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구술·채록했다. 제주4.3연구소에서 진행한 구술 채록은 민주화 이후 막 시작된 4.3연구가 대부분 진실과는 괴리가 있는 2차 자료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장의 증언을 담은 1차 자료를 통한 논의의 필요성에서 증언 채록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구술채록 작업은 4.3의 사건사 연구와 더불어 4.3의 진실 규명하는 큰 기여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기존의 진상규명운동의 차원이 아닌 4.3에 대한 보다 학문적 성격의 연구가 시도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는 양정심(199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양정심(1995)은 기존의 연구들이 4.3항쟁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한 점은 있으나, 항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분석한 연구가 없음을 지적하며, 주도 세력이었던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제주도민과 결합해 나가는 과정과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항쟁의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양정심의 분석은 사



건의 전개과정과 배경에만 치중해온 기존 연구에서 남로당이라는 주체세력을 분석하면서 4.3논의를 보다 학술적 성격의 논의의 장으로 끌어왔다는 평가할 수 있다.

1999년 제주4.3 제50주년 기념사업 추진 범국민위원회가 간행한 『제주4.3 연구』는 4.3에 관한 제대로 된 연구서적 하나 없는 현실적 상황과 4.3이란 무엇인가, 그 역사의 정명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정치학, 법학, 인류학, 의학 등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접근을 통해 4.3연구가 진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화 이후부터 진상보고서 발간 이전까지의 4.3의 연구 경향은 정리하자면, 주로 진실 알리기 차원은 사건연구와 구술연구가 주를 이루면서, 보다 학술적 연구로 발전되어가는 흐름을 나타냈다.

2.3 진상보고서 발간 이후

2003년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해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진상보고서 발간을 통해 중간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4.3에 대한 논의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진상보고서 발간 이후의 4.3의 연구경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경향은 새로운 접근법과 시각에서의 4.3연구이다. 진상보고서 발간으로 이전의 4.3연구가 목표한 진실 알리기라는 1차적 목표가 달성되자, 비로소 4.3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과 시각에서의 연구들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 국제법적 시각에서 피해와 유족에 대한 배상방법을 다룬 법학연구(오윤석 2004)에서 미술 치료적 접근을 통한 생존자들의 트라우마적 심층심리



를 분석한 심리학 연구(김유경·최외선·김갑숙 2012)와 제주평화공원을 찾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방문동기를 비교분석한 관광학 분야의 연구(장혜원·김태훈·정철, 2011)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와 주제로 4.3의 논의가 확대되었다. 4.3의 확대된 외연 속에서도 특히 제노사이드적 관점의 연구 활성화는 진상보고서 발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대표적으로 허호준(2004), 최호근(2005), 권귀숙(2006)의 연구는 4.3의 대량학살 문제에 집중하여, 제노사이드 관점과 이론에서 4.3을 분석하고 있다. 4.3을 제노사이드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는 진상보고서가 학살론의 토대 위에 발간되기 이전까지는 학술적 장에서 보기 힘든 접근법이었다. 따라서 진상보고서 발간이후 제노사이드적 관점에서의 연구의 활성화는 진상보고서의 발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두드러진 경향은 이른바 4.3 진실 찾기 과정을 분석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오랜 기간 억압되어온 4.3을 수면 위로 부상시키고, 특별법 제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최초의 과거사 진상보고서의 발간은 학술적 연구를 하나의 축으로 한 4.3진상규명운동이 일궈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과정을 분석한 연구도 진상보고서 발간 이후의 주요한 연구 흐름 중 하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먼저 진상보고서 발간 이전이지만, 강창일(200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강창일(2001)은 제2공화국에서 국민의 정부에 이르는 시기까지의 4.3진상운동의 궤적을 검토하고, 그 과정을 한국의 민주주의와 연관시켜 파악하고, 문제점을 평가했다. 박찬식(2003)의 연구도 4.3의 진상규명 과정을 인권 회복을 위한 민주화 운동의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4.19혁명 직후의 시기부터 진상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에 이르는 시기의 진상규명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강창일(2001)과 박찬식(2003)의 연구 모두 진상보고서 발간에 이르는 4.3의 진상규명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외의 진상규명과정에 대한 다른 시각의 접근으로는 2004년 역사비평사에 출간한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4.3의 진상



규명운동이 어떠한 문화운동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위령의례, 영상, 음악, 미술, 문학작품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4.3의 진상규명운동이 문화운동이라는 방식을 통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줌으로써 탄압이 얼마나 억압적이었는가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세 번째 경향은 『4.3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연구이다. 진상규명운동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진상보고서가 발간되자, 그 역사적 의미와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연구가 이어졌다. 허상수(2004)는 진상보고서의 채택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진상보고서의 채택은 냉전으로부터 억압받아온 제주도민들의 삶의 중대한 변화이며,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재승(2004) 역시 반공과 분단체제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적 현실적 제약 조건 속에서 진상보고서가 발간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4.3사건을 국가폭력의 관점에서의 규정, 국가책임의 범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유족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방안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음을 지적하고, 몇 가지 사항만 시정하고 숙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족과 희생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진상보고서를 평가하는 연구(허상수 2003; 박찬식 2004; 이재승 2004; 허상수 2004)들은 진상보고서의 발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진상보고서의 발간은 사건의 성격 규명과 역사적 평가가 유보된, 4.3 해결을 위한 중간적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유되고 있다.

그럼에도 진상보고서 발간 이후 점차 4.3에 대한 논의는 축소되어가고 있으며, 대중의 관심과도 유리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4.3논의의 와해현상은 진상보고서의 발간이 4.3해결을 위한 중간적 합의였는지 정치적 타협을 위한 ‘미봉책’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4.3의 진상조사보고서가 만들어진 담론적 배경과 4.3의 담론이 어떻게 형성·변화되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담론 속에는 그 시대의 정치사회적 맥락이



투영되어있기 때문이다. 형성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담론의 중요성에도 정작 4.3의 담론을 주목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4.3의 담론을 본격적으로 주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고성만(2005)과 김민환(2012, 2014)의 연구가 있다.

먼저, 고성만(2005)은 4.3담론을 시기별로 크게 폭동론, 항쟁론, 양민학살론, 화해상생론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담론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누구에서 주도되었으며, 어떠한 담론효과를 통해 담론정치가 작동되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분석은 이전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만 4.3의 담론을 다루던 것에서 나아가 본격적으로 4.3의 담론을 연구를 집중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4.3의 담론의 변화과정을 보여주었지만, 변화한 담론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담론이라는 개념에만 의존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정치사회적 분석을 시도한다고 했으나, 정치적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사회적 배경 분석이 얼마나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민환(2014)은 제주4.3의 담론들이 어떠한 상호관계구조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했다. 그는 폭동론, 항쟁론, 양민학살론이라는 해석들이 어떠한 상호 연대와 분리의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국가폭력론을 형성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기존의 단일한 민중항쟁론으로 파악되어온 항쟁론을 북한지향, 반분단-반외세, 자위적 항쟁론으로 분화시켜 파악함으로써 보다 엄밀한 설명을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같이 민주화 이후 조각난 4.3의 기억들을 복원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져왔지만, 여전히 4.3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첫 번째로 제주4.3이 여전히 한국사회를 표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7년이라는 전환을 기점으로 과거의 많은 기억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다시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기억과의 전쟁을 통해 진실을 회복하고 그 성격을 부여 받은 사



건도 있는 반면 다시 망각되어가는 사건도 존재하고 있다. 제주4.3의 경우 분명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기억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지만, 수많은 학술적 노력에도 여전히 사건의 성격조차 규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표류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제주 4.3의 기억이 표류하는 상태, 즉 ‘사건’으로서 미봉된 채로 박제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70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반복되는 정치적 변동에 따라 폭동, 항쟁, 학살 등의 담론의 부침을 거듭해왔고, 오늘날 ‘사건’으로서 미봉의 첩표를 찍어두고 있다. ‘비극’의 역사로 승화된 이후 4.3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논의는 점차 대중의 관심과 유리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피로를 야기하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4.3은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의 서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 규정과 평가가 유보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4.3의 특별법 제정과 진상보고서의 발간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라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4.3이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고성만 2003, 347). 4.3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과거와 현재와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한 규명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이상에서의 문제의식과 연구 공백지점에서 출발하여 제주4.3담론 재구성 과정을 주목하고, 4.3의 담론이 어떠한 외적요인에 의해서 재구성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고찰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로서 기억연구의 관점에서 과거의 기억이 어떠한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재구성될 수 있는가에 대해 고찰한다. 기억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 기억이 형성되는 사회적 틀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 틀 속에서 구성원들 간의 접촉점들을 중심으로 한 교류를 바탕으로 기억이 재구성된다. 따라서 어느 사회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 혹은 담론이 재구성되었다는 것은 그 사회 전체의 틀이 변화했거나, 구성원들 간의 특정한 접촉점을 중심으로 교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2장에서의 이론적 전제와 논의는 본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유익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4.3의 담론 재구성을 추동한 정치사회적 외적요인을 주목한다. 정치사회적 요인은 냉전반공체제의 형성과 민주화라는 정치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4.3의 담론이 각각 폭동론과 항쟁론이 재현시키는 주요한 배경이었다. 하지만 정치사회적 요인은 폭동론과 항쟁론이 공식담론화와 재현은 설명할 수 있었지만, 학살론의 주목과 공식담론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경시되어온 경제적 요인을 통하여 학살론으로 합의가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제4장에서는 시되어온 경제적 요인을 통하여 학살론으로 합의가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4.3논의를 두고 폭동론과 항쟁론을 중심으로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던 당시, 경제적으로는 제주도는 세계화와 농산물시장 개방이라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는 위기의 타개책으로 ‘평화의 섬’이라는 개발 모



델을 구상을 고안해낸다. 하지만 평화의 섬이라는 구상은 불분명한 실체로 인해 국내외적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기억들을 동원하여 평화의 섬 구상을 완성해나간다. 이 과정에서 4.3은 제주도민의 억압과 수난의 상징으로써 평화의 섬 구상에 동원된다. 4.3이 평화의 섬 구상에 포섭됨에 따라 이후 진행된 4.3의 진상규명작업과 진상보고서 작성은 평화의 섬 구상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한다.



II. 이론적 논의

서구 지식사회의 기억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의 신화와 문학에서부터 시작하여 플라톤(Plato), 니체(Friedrich W. Nietzsche), 벤야민(Walter Benjamin), 알박스(Maurice Halbwachs), 피에르 노라(Pierre Nora) 등의 작업에 이르기까지 오랜 지적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오랜 전통에도 기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오늘날 흔히 기억의 붐 혹은 기억 산업¹⁾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과거의 기억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의 증가는 다음과 역사적 배경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먼저 1980년대 무렵부터 나치 시기의 영웅들의 기억만이 조명되던 과거의 경향을 벗어나,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들이 재현되고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세계사적 탈냉전의 흐름과 아시아와 남미 등지의 군부권위주의 독재국가들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억압된 기억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기억에 대한 관심을 한껏 고무시켰다는 것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세계적 기억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한국 사회에서도 이어진다. 한국 사회 내부적으로는 민주화 물결은 기억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촉발시킨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또 국제적으로는 1982년의 일본의 교과서 파동도 기억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일본 교과서에서 1945년 이전의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려는 시도가 발견되자, 시민사회는 공분했고, 1987년 독립기념관이 개관하는 대응으로 이어졌다(정근식 2014, 288-289).

기억에 대한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발 맞춰 학술 영역에서도 기억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1990년대 말 모리스 알박스(Maurice

1) 클라인(Klein 2000)은 1980년 이후 20여 년간 진행된 사회과학 및 인문학 분야의 사회적 기억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클라인은 어떤 특정한 영역이 갑자기 부상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유행처럼 그 영역에 몰려든 현상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현상을 '산업'이라는 표현하고, 기억연구 역시 마침내 산업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며 평가했다.



Halbwachs)의 집합기억에 대한 기념이 김영범(1998)에 의해 소개되었고, 이행기 공간에서 과거사 청산이라는 현실적 과업과 맞물려 학문 영역에서의 기억에 대한 논의는 수용과 동시에 따르게 확산되었다.

서구 학계에서 점화된 기억에 대한 관심은 이제 한국 학술영역에서 사회학, 역사학 등의 분야에서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닌 친숙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분과학문 정치학에서는 여전히 소개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질적이고 낯선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이 현재와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정치적 기회와 한계를 만들어낸다는 주장(올릭 2006, 71)을 무리 없이 받아들인다면, 정치학에서도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닐 것이다. 특히 폭력으로 얼룩져 한 사회가 의도적으로 망각하고자 했던 기억과 망각을 강요받았던 기억과의 대면은 한 사회의 정치사회적 담론을 넘어 구조를 재구성하는 강렬한 기제가 되어왔다. 예를 들어, 오늘날 과거사 문제에 있어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는 독일과 일본의 전후 초기 과거를 대면하는 태도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독일은 전후 초기 몇 년 동안은 이스라엘에 배상금 지급과 사과 등의 “적당한(modest)” 뉘우침을 표하는 것 외에는 독일의 기념과 교육 그리고 대중담론은 독일의 잔학행위를 무시하고, 전쟁 중의 독일이 겪은 고통을 애도하기에 급급했다(Lind 2008, 3). 마찬가지로 일본의 전후는 1945년 8월 18일 천황의 항복 선언과 함께 시작되었다. 천황의 항복 선언은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과거와는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사회의 출발을 의미했다(글룩 2006, 335). 이처럼 전후 초기 두 국가가 비슷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오늘날 두 국가에 대한 평가를 선명하게 갈리고 있다. 물론 현재도 독일의 과거와의 대면 방식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대중담론 속에서 독일은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일본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본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의 차이는 결국 독일로 하여금 나치즘



과 홀로코스트 문제라는 독일 정치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강한 제약이 되고 있다. 일본 역시 과거의 문제로 인해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과거사 문제를 대면할 경우 정치적 위협이 되는 딜레마적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제3의 물결 속에서 민주화를 이룩한 국가들의 대부분이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 독재정권의 기억에 직간접적인 영향 하 놓여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기억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기억과 망각에 내재된 정치성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기억되는 것인가는 물론 무엇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형태로 기억되는가”라는 것이 될 것이다(Said 2000, 176). 이번 장에서는 기억은 어떠한 조건에서 형성되는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억과 그 사회적 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공간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기억의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제1절 기억의 사회적 틀

21세기 기술 문명의 진보와 전쟁이 낳은 대규모 이주는 한 국가 안에서 머물던 기억들이 서로 얽히고설켜 지구적 기억 공간을 등장시키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임지현 2016, 3-4). 즉 21세기의 새로운 기억문화가 과거와 구분되는 지점은 일국적 혹은 지역적 ‘공간’에 머물러온 기억이 지구적 ‘공간’으로 확장되었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이 기억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공간’의 변화로 규정될 수 있는 이유는 기억 연구에서 기억이 특정한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전제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기억이 특정한 공간을 매개함을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는 모리스 알박스이다. 그는 대부분의 기억 연구에서 한 번쯤은 언급되는 학자이다. 그 이유는 알박스가 기억의 사회성을 주목하고 처음으로 집합기억을 창안해낸 상징적인 학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며, 실질적 참고자료가 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언급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올릭 2011, 18). 하지만 현대 기억 연구에서 중요한 위상은 차지하고 있는 피에르 노라(2010)의 기억의 터 프로젝트와 알라이다 아스만(2011)의 문화적 기억 개념의 이론적 출발점에 알박스의 이론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 알박스의 이론을 통해 기억의 기본적인 전제를 다시 확인해보겠다.

알박스는 기억을 개인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 것으로 파악하고 기억의 구성과 전달과정을 통해 기억이 지극히 사회적인 현상임을 보여주고자 했다(김영범 1999, 572). 그렇기에 알박스의 기억이론에서 기억의 사회적 틀이라는 개념은 그의 논의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기억이란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며, 기억의 재현과 배치 역시 사회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는 기억에 대한 집합적 틀을



제공하는 공간이며, 오직 사회적 틀 속에서만 기억의 행위와 범위 그리고 내용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 기억의 사회적 틀을 통해 형성된 기억은 구성원들에게 다른 집단과는 구별되는 정체성을 형성시킨다(Halbwachs 1992, 38-43).

기억의 사회적 틀이 개인 그리고 나아가 사회의 정체성을 규정해온 사례는 세계사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코니(Cony 2006)는 소련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된 10월 혁명이 글라스노스트(Glasnost) 이후에도 어떻게 지속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 분석을 시도했다. 코니는 10월 혁명의 기억이 만들어진 과정을 주목했다. 그 결과 1917년 10월 혁명 이후 10년간 10월에 대한 기억은 국가의 기억프로젝트에 의해 언어적, 제도적, 문화적 형태로 구성된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즉 소련에서 기억되는 10월 혁명의 이미지 속에는 실제 혁명에 참가한 사람들의 직접적인 체험은 존재하지 않고, 국가에 의해 사후적으로 구성된 상상된 이미지였다. 이렇게 상상된 10월 혁명의 이미지는 소련 체제를 정당화하는 도구이자 소련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참포니(Zamponi 2006)의 작업을 통해서도, 사회적 기억은 그것을 규정하는 틀에 의해서 규정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참포니는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파시스트 운동을 분석했다. 무솔리니는 파시스트 운동에 영웅주의와 투쟁 그리고 희생의 가치를 전략적으로 결합시켰다. 그 결과 파시스트 운동에 참여하는 파시스트들은 그들이 파시스트 운동을 통해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이탈리아 공동체를 위한 숭고한 행위로 여기기 시작했다. 로마 진격의 사례는 무솔리니의 전략이 파시스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타났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파시스트들은 로마 진격의 특이성²⁾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격을 신성화 시

2) 참포니에 따르면 무솔리니의 로마 진격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며, 파시스트들이 만들어낸 신화이다. 1922년 무솔리니 주도 하에 로마에서의 봉기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봉기 이전에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국왕과의 협상을 시도했고, 무솔리니의 제안이 극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무솔리니는 1922년 10월 30일 수상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무솔리니가 수상에 오르자 다음날 그의 추종자들이 로마로 진격했다. 이 진격이 어떠한 측면에서는 혁명적 성격도 지닌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진격은 파시스트들의 만들어낸 진격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승리를 기념하는



키고 그것을 ‘혁명’으로 만들어냈다. 왜냐하면 로마 진격을 ‘혁명’으로 상기시키는 과정을 통해 파시스트들은 스스로를 ‘혁명가’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정치적 변동기마다 우리는 흔히 빨갱이와 폭도로 호명되었던 이들의 명칭이 희생자와 민주투사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장면을 목격해왔다. 빨갱이와 폭도에서 민주투사와 희생자로 이어지는 정체성 변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의 존재는 사회적 틀에 의해서 규정됨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즉 어떠한 기억의 사회적 틀 속에 구성원이 위치해있느냐에 따라서, 한 개인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것임은 물론 스스로도 자신의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형태를 통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결국 기억이란 특정한 집단 혹은 사회적 틀 속에서 구성되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알박스의 관점에서는 특정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구성됨에 있어서 개인의 기억은 중요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어떠한 기억의 사회적 틀을 매개하여 기억하느냐에 따라 그 구성원들의 정체성은 규정·형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알박스의 주장은 사회 속에서 개인의 존재가 무시된 집단주의적 사고에 매몰된 것이라는 비판의 지점이 명확히 존재했다. 이에 대해서 알박스도 기억의 사회적 틀 안에서만이 기억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자신의 주장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에 알박스는 자신의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 기억의 틀이 형성·유지되기 위해서는 나와 타인을 이어주는 ‘접촉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집단들과의 필수적인 입장과 교류를 통해 개인과 타인 그리고 집단 간의 기억의 조화를 이루어 내야한다는 것이다(Halbwachs 1992, 40, 52-53). 그렇다면 이 접촉점은 무엇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거리 행진의 성격이 강했다(참포니 2006, 71-73).



형성될 수 있는가? 이러한 기억의 구성되는 접촉점은 국가 또는 특정 집단의 전략적 행동에 의해 형성되고, 이 접촉점을 통해 형성된 기억의 사회적 틀은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왔다. 다음 절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과거정상화 시도와 역사 수정주의 논의를 통해 기억의 사회적 틀의 형성에 있어서 국가와 집단의 영향을 살펴보겠다.



제2절 독일과 일본의 사례

홀로코스트 부정론이란 원래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전범들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기 위해 동원된 방법 중 하나였다. 이러한 나치전범들에 의해 만들어진 홀로코스트 부정론은 이후 네오 나치주의자들에게로 이어졌다. 이러한 홀로코스트 부정론의 논리는 단순하다. 유대인 절멸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홀로코스트도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이재승 2008. 226). 하지만 이러한 부정론은 정치·사회적으로 비상식적인 것으로 치부되며 거부되었고, 독일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홀로코스트 부정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정주의를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한다. 왜냐하면 수정주의적 해석은 새로운 지적 자극을 제공한다. 점에서 학계에서도 비교적 너그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으며, 부정주의를 처벌하는 국가에서도 수정주의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재승 2008, 228-229).

1986년 독일 역사가 논쟁은 이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논쟁은 독일의 역사가 에른스트 놀테(Ernst Nolte)에 의해 촉발되었다. 논쟁을 촉발시킨 그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치와 히틀러는 어쩌면 그들 자신들을 오로지 ‘아시아적’ 범죄행위의 잠재적인 혹은 실제적인 희생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아시아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을까? 수용소 군도는 아우슈비츠보다 먼저였지 않은가.”(Nolte 1986; 김성희·이덕형 2005에서 재인용). 이러한 놀테의 주장은 아시아적 범죄행위, 즉 볼셰비키에 의해 행해진 폭력과 나치의 범죄를 대비시킴으로써 나치 범죄는 특별한 것이 아니며, 인류사에서 반복되는 현상으로 상대화시키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홀로코스트 부정론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도 부정론의 움직임이 일기 시



작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50주년 기념일 직전인 1995년 1월 일본의 분게이슌슈사가 발행하는 『마르코폴로』라는 잡지에서 홀로코스트를 전면 부정하는 기사가 실리게 된다. 일본 사회의 큰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마르코폴로 사건은 결국 유대인의 강력한 항의와 일본 사회의 비판 여론으로 해당 잡지는 폐간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 듯 했다. 하지만 마르코폴로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 부정론의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르코폴로 사건이후 일본에서는 ‘자유주의사관연구회’의 후지오카 노부가츠를 중심으로 남경 대학살과 종군 위안부 문제를 통한 자학사관 비판을 시작으로, 후지오카와 니시오 간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발족하게 된다(테츠야 1999, 262-263).

이들은 전쟁 범죄 그 자체를 부인할 수 없었지만, 역사 수정주의 접근을 통해 과거 일본의 전쟁범죄를 끊임없이 상대화 시키고자 시도했다. 이들의 초점은 주로 난징 대학살에 맞춰졌다. 이들은 난징에서의 학살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희생자 수를 적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학살이라는 것은 날조임을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남경에서의 희생자 수는 중국이 주장하는 20~30만 명이 아닌, 최대한으로 잡아도 만 명에 미치지 않으며, 그 중 일반인 희생자는 47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은 난징에서의 학살을 날조라는 방식으로 축소시키는 한편,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희생자 수는 200만에서 300만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테츠야 1999, 264-265).

네오 나치주의자들과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시도는 이념적 차이에 따른 개인적 차원의 일탈적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이들의 행위를 개인적 차원의 일탈로 보기에선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독일과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흐름은 분명 당대의 정치·사회적 요구와 흐름이 반영된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독일의 사례로 돌아가 정치사회적 요구가 과거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살펴보자.

오늘날 독일은 과거사 처리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



지만 독일이 처음부터 과거사 처리에 있어 모범적이라고 평가될 만한 태도를 보였던 것은 아니다. 위르겐 코카(Jurgen Kocka 2004)는 독일의 과거사 처리과정을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네 시기로 구분하였는데, 코카의 시기 구분을 기준으로 삼아 독일이 과거와의 대면의 과정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 시기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로 승전국의 주도 하에 독일 사회의 탈나치화가 진행되었다. 승전국의 주도 하에 나치전범 재판이 진행되었고, 대규모 처벌도 이어졌다. 하지만 코카에 따르면 이 시기에 정작 독일 사회에 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으며, 여전히 많은 독일인들이 나치즘은 기본적으로 좋은 이념이었지만 그 시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코카 2004, 115).

두 번째 시기는 1948-49년에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유럽에서 냉전이 본격화 되면서, 서독의 과거사 논의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만든다. 서독 사회는 194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간 나치범죄에 대해 침묵한다. 그 이유는 2차 대전과 전범재판 그리고 냉전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서독 사회의 정책의 방향이 나치 범죄 처벌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에 맞춰졌기 때문이다(박재영·김영란 2009, 117).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 아데나우어(Konrad Adenauer) 정권은 이스라엘과의 관계회복 및 보상 등의 최소한의 방법을 통해 과거의 문제를 매듭 짓고 자 했다. 이러한 1950년대의 서독의 과거대면 방식에 대해 아도르노(Theodor Adorno)는 과거에 대한 진지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마치 책장의 페이지를 넘겨버리듯이, 가능하다면 기억에서 씻어 내 버리고 싶다는 욕망이 전제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Adorno 1986, 115).

세 번째 시기는 1950년 말부터 약 20여간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는 주된 움직임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나치과거를 비판적으로 재평가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68학생 운동세대들은 이전 세대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를 비판적으로 평가



하기 시작했고, 나치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논쟁 등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기는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재민족주의화 현상이다. 독일인들이 자신들의 뿌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방사, 왕조 역사 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앞서 논한 1986년 역사가 논쟁과 같은 독일과거를 재형상화하고 일반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정인모 2004, 440-441). 1980년대 서독 사회에서 과거의 정상화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첫 번째 의미는 상대화로서의 정상화이다. 독일의 과거가 끔찍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의 과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독일의 과거사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의미의 정상화는 규율화나 의례화(형식화)를 뜻하였다. 서독의 역사가 40년이 지난 후에 기념 기구는 다소 능률적인 기계장치가 되어버렸다. 역사적 책임에 대한 인정은 정치 연설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버렸다(올릭 2006, 300-301).

이상에서 살펴본 독일의 과거사 처리과정과 일련의 부정주의 흐름을 미뤄볼 때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은 정치사회적 환경, 즉 해당 기억의 진실보다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외적요인들의 강한 영향 아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외적요인 1: 정치사회적 요인

영국의 역사가인 버크(Burke 1989)는 기억의 재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을 매개하여 기억이 재현되는가에 있다고 말했다. 버크에 따르면 기억의 재현은 특정 매개물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매개물을 구술, 문서, 이미지, 행위, 공간으로 분류한 바 있다.³⁾ 기억의 재현이란 세계에 대하여 타인에게 언어를 사용하여 어떤 의미 있는 것을 말하거나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원들 간에 의미가 생산되고 교환되는 과정이다. 즉 기억의 재현이란 특정한 언어 또는 대상을 매개하여 과거에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미지를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재생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나간채 2004, 18; 허쉬 2009, 13-15 참조). 버크가 말한 매개물을 통한 기억의 재현은 알박스가 말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기억을 연결 및 형성시켜주는 ‘접촉점’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상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기억과 담론의 재구성은 과거의 기억이 무엇을 매개하여 재현되는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억의 재현은 매개물을 통해 시작되며, 그 내용도 어떠한 매개물을 통해 기억이 재현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들을 바탕으로 이번 장에서는 4.3의 담론의 재구성을 추동한 첫 번째 외적요인으로서 정치사회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를 위해 4.3의 기억투쟁과정에서 각 담론들이 어떠한 전략 하에서 기억의 ‘매개물’을 동원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식 담론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3) 버크에 따르면 구술은 말로 문서는 글로 전해지는 대표적인 매개체이다. 이미지의 경우 사진, 영화, 기념관 등에 의해서 기억이 전수되는 매개체를 뜻하며, 행위는 공적 또는 사적 의례처럼 과거가 공연으로 재현되는 경로를 의미한다(Burke 1989).



제1절 냉전반공체제의 형성과 지속

1948년 4월 5일 5.10선거 촉성대회 경무부장 조병옥의 말에 의해서 4.3이 폭동으로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박찬식 2007, 172에서 재인용). 사건 발발 초기 보도 자료를 분석한 박찬식(2007)에 따르면 사건에 대한 초기 인식은 ‘폭동’ 외에도 ‘사건’, ‘소요’, ‘항쟁’ 등 다양한 인식이 산재되어 있었으며, 이후 각 매체들의 정치적 성향과 사건의 전개 국면에 따라 사건에 대한 기술방식이 변화했다. 실제로 당시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4.3을 처음으로 폭동으로 언급한 조병옥조차도 폭동과 사건이라는 용어를 혼재해 사용하고 있었다. 1948년 4월 7일 자경향신문은 경무부장 조병옥의 담화를 통해 제주도에서 좌익계열에 의한 좌익 폭동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한 달 뒤 경향신문은 다시 제주도 치안문제에 대한 경무부장 조병옥의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때 조병옥은 제주도 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경향신문 1948/5/9). 1948년 6월 24일 조병옥은 다시 한 달 뒤 조병옥은 제주도 ‘사태’ 수습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 담화에서는 사건과 사태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동아일보 1948/6/24). 이러한 경무부의 담화와 보도 자료에서의 혼재된 용어 사용은 정치적 성향과 사건의 전개국면에 따른 변화 이전에 근본적으로는 국가와 공적영역에서 4.3의 성격이 ‘폭동’으로서 규정되지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4.3은 언제부터 한국사회에서 ‘폭동’으로서 인식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일까? 이러한 인식은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면서 빠르게 확산·정립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0월 여·순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을 배경으로 제정되었는데, 이 법안이 제정된 이후부터 4.3에 대한 인식이 ‘폭동’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언론 기사들에서도 기존에 4.3을 사태, 폭동, 소요 등



의 표현을 혼재하여 사용하던 것에서 보안법 제정이후부터는 여순사건과 동일선상에 놓고 4.3을 반란으로 표현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동아일보 1949/3/12; 경향신문 1949/3/12). 즉 여순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4.3의 산재된 기억을 국가에 대한 범죄이자 반란인 ‘폭동’으로 정립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억압적 장치의 작동으로 4.3에 대한 논의는 법적으로 통제되었으며, 한국전쟁을 통해 이 제도적 장치는 냉전반공이데올로기로서 한국사회의 헤게모니로 자리잡게 된다. 즉 4.3사건은 “폭력의 담지자인 국가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폭력이 국가 형성을 완성시키는 기제가 되었다(조명기·장세용 2013, 208).

냉전과 반공체제의 형성과정에서 4.3사건과 맞물려 움직여왔음을 상기 시킬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4.3이 해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냉전반공체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4.3사건의 발발배경에서의 남로당과의 연관성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이유는 4.3사건이 국가 형성기에 반공체제를 굳건히 하면서 국가 형성의 기제로 작용했다는 특수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4.3 발생 당시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인식들은 ‘폭동론’을 공식화하기 위한 기억의 투쟁과정 속에서 망각되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성된 억압과 공포의 분위기는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 전체로 확대되어 4.3은 폭동이라는 기억이 한구사회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4.3에 대한 폭동론의 공식담론화는 국가의 공포와 억압이라는 전략 하에서 반공이데올로기와 국가보안을 매개하여 완성되어갔다. 이는 주로 군경을 중심으로 한 관찬서를 통해 주도되었으며 교과서, 반공영화, 등을 통해 보강·전파되었다. 나아가 공포와 억압의 전략 하에서는 국가의 공식규정에 대한 의심과 도전은 가혹한 법적 규제와 물리적 탄압의 대상이 된다는 두려움에 의해 일종의 성역처럼 부각되었다(김영범 2004, 71). 이러한 이유에서 4.3은 한국사회에서 오랜 기간 공산폭동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



고, 또 그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금단의 영역의 문제로 치부되어야만 했다.

결국 4.3은 반공국가 완성을 위해 동원된 하나의 명분이었던 것이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4.3이 발생한 시기는 국가가 형성되어 가는 시기였다. 이시기에는 경찰의 군사화·준군사화에 따른 양적·질적 팽창과 반공이데올로기의 강압적 내면화 등 대국민통제의 기초가 확립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다(강혜경 2005, 1-2). 따라서 4.3을 진압했던 세력들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폭력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또 반공국가의 완성을 위해 반공이데올로기를 동원했다. 이것은 비슷한 시기 발생한 여순사건 등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국가의 모든 국가폭력을 최소화하고 은폐시키기 위해 국가권력이 고안한 정치수단이자 기억투쟁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4.3은 “분단체제하 반공국가가 자기 탄생을 미화하고 자기보위의 요구를 강력히 발하면서 민중저항에 대한 탄압과 반인권적 폭력을 정당화한 최초의 역사적 선례로 남게 되었다.”(김영범 2004, 70).



제2절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기억투쟁

1987년 한국사회의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 군사정권 하에서 억압되어왔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재현·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4.3에 대한 망각되었던 기억들도 표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4.3의 경우 이 시기의 다른 과거사 의제들과 비교해 볼 때 그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 왜냐하면 4.3의 기억을 억압해온 냉전적 반공이데올로기가 여전히 한국사회의 헤게모니로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제주사회에서 4.3에 대한 기억들이 표출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냉전적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장벽에 구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1980년대 4.3의 대항 기억들이 투쟁의 전략으로 채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문화운동을 매개하는 것이었다.

4.3의 기억투쟁의 일환으로 진행된 문화운동은 왜곡된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내거나 이미 주어진 진리를 드러내려는 욕구에서 출발했다고. 하지만 문화적 텍스트 생산자들은 국가권력의 감시 또는 검열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간접적인 방식의 운동의 형태를 취해야만 했다. 이러한 방식의 대표적인 운동이 문학운동과 의례공간에서의 투쟁이다. 문학을 매개한 기억투쟁은 한국사회에서 금기시 되어온 4.3에 대한 금기를 최초로 깨고 공론화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4.3의 의례의 경우 문학을 통해 시작된 4.3의 기억투쟁이 실제 현실적 투쟁으로 발현된, 이른바 4.3의 기억을 놓고 벌어진 기억의 전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1 문학과 의례공간에서의 기억투쟁과 그 한계

4.3의 기억투쟁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작품은 1978년 발표된 현기영의 『순이삼촌』이다. 물론 이 작품은 출간 직후 곧 판금조치와 작가가 군경들에 의해 고초를 겪어야 했지만, 금단의 벽을 최초로 넘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지닌다. 현기영의 『순이삼촌』을 시작으로 문화영역에서의 기억투쟁은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문학영역에서의 4.3의 항쟁기억을 재현하기 위한 기억투쟁은 ‘비극성 드러내기’라는 방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비극성 드러내기’는 현기영의 『순이삼촌』을 시작으로 1980년대 중반까지 증언문학의 형식으로 재현되어왔는데, 이는 기존의 제주사회에서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이야기들을 문학으로 응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기의 이러한 ‘비극성 드러내기’의 성격을 지닌 증언문학들은 언급조차 할 수 없었던 4.3의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4.3문학이 기억투쟁을 위한 대항담론으로 본격적으로 역할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이다. 이를 계기로 4.3문학의 기존의 ‘비극성 드러내기’에서 나아가 외연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소설과 시 분야에서 반미·반제 성격의 4.3의 항쟁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작품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또 이 시기에는 4.3문학이 운동으로서 본격화 된 시기이기도 한데, 4.3과 관련된 문인들을 중심으로 문학단체가 결성되었고, 이 단체를 중심으로 4.3의 기억투쟁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김동운 2004, 222-228)

하지만 6월 항쟁 이후 4.3에 대한 논의가 보다 진전되었지만, 4.3문학도 모든 장르에서 본격화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이전의 문학에 비해 독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김동운 2004).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4.3에 대한 구술 작업이 진행되면서 4.3문학이 기록물로서의 위상이 약화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4.3의 문화운동을 통한 기억 투쟁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로서 문화운동을 통해 4.3의 기억 투쟁을 진행했던 이들은 문화운동을 통해 4.3을 말하고자 했다가보다 4.3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 내기에 방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억압적 상황에서 문화운동을 통해 4.3의 항쟁의 기억 등이 재현되고, 4.3의 비극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문화운동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4.3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4.3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근본적인 한계는 4.3논의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즉 4.3에 대한 기억이 문학을 매개하여 표출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의 열기 속에 서로 다른 정치적 지향과 목소리가 4.3이라는 사건을 매개로 표출된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공포와 억압의 분위기가 약화되면서 4.3의 기억투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민주화 이후 4.3의 기억투쟁은 과거와 비견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방식들 중에서도 특히 선호되었던 방법은 의례투쟁이었다. 왜냐하면 의례는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기억투쟁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최선이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전의 억압적 상황에서 4.3은 철저히 망각되어야 하는 기억이었다. 심지어 제사를 지내는 것조차 불온시 되어왔으며, 원혼을 달래는 공식적 의례행사 역시 봉쇄되어왔다. 따라서 민주화 이전까지 4.3의 의례는 대부분 개인의 제사의례로만 존재해왔으며, 이 제사의례는 국가의 억압 속에서 4.3에 대한 항쟁 기억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였다(강창일·현혜경 2004, 70)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4.3의 의례도 변화를 겪게 된다. 민주화세력을 중심으로 4.3의 추모제가 추진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위령제’라는 이름으로 보수적 성향의 유족들의 의례가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민주화 이후 4.3에 대한 기억이 쏟아지면서 제주



사회는 갈등과 분열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또 특히 4.3의 의례에서 위령제와 추모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추진세력들 간의 갈등은 마치 전장을 방불케 했다.

공산폭동론이라는 지배담론구조 하에서 제주사회는 제주4.3의 상처를 내면화하고 끊임없는 자기검열을 통해 4.3의 기억을 망각해야만 했다. 그렇기에 공산폭동론 하에서 ‘표면적’으로는 분열과 갈등은 분출되지 않아왔다. 하지만 민주화와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 4.3에 ‘항쟁’과 ‘학살’의 기억이 재현되기 시작했고, 제주사회는 이들 담론간의 대립하게 된다.

4.3의 의례에서 공산폭동론과 민중항쟁론 간의 기억투쟁이 특히 두드러졌는데⁴⁾ 이 두 입장 사이의 갈등은 4.3위령제와 추모제의 봉행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1991년부터 매해 제주4.3의 추도의례는 우익진영으로 대표되는 ‘4.3유족회’의 위령제와 진보단체인 ‘사월제공준위’의 추모제로 명칭을 달리하여 진행되어왔다. 그러다 1994년부터 제주도와 도의회의 중재와 재정적 지원을 받아 범도민 행사로 4.3희생자 합동위령제로 봉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매년 합동위령제 봉행위원회가 구성될때마다 갈등은 반복되었고, 1996년의 경우에는 폭동이나 항쟁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합의하에 가까스로 위령제가 봉행될 정도였다(고경민 2013, 92-93).

4.3의 의례에서의 매해 갈등이 계속되자 제주도의회와 제민일보가 중심이 되어 갈등의 봉합지점을 찾고자 한다. 이들은 제주4.3에 대한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고, 제주4.3의 대량학살이라는 정치적 결과를 강조함으로써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4.3의 재조명했다(김성례 1999, 253-254).

4) 공산폭동론은 제주4.3사건의 희생자들 중 군경유가족 및 우익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반공유족회(4.3유족회로 개칭)’가 대표적 집단이며, 민중항쟁론의 4.3연구소를 중심으로 결성된 ‘사월제 공준위’가 대표적인 집단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성례(1999, 252)를 보라.



2.3 대안적 해석의 주목

4.3을 양민학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는 4.19혁명 이후 새로운 정치 공간에서 시작되었다(김민환 2014, 78). 당시 대두된 양민학살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토벌대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양민’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민학살론은 공산폭동론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은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공포와 억압으로 형성된 공산폭동론의 구조 하에서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한 도전을 시도될 수 없었고, 단지 억울한 ‘양민’에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려는 것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4.19혁명 이후 제기된 양민학살론은 이후 5.16군사정변이 발생하며, 기억 속에서 망각되어 갔다.

4.3의 공식기억 속에서 오랜 기간 망각 되었던 ‘학살’의 기억은 1987년 민주화로 다시 재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양민학살론은 민주화 이후의 국면에서도 항쟁론과 폭동론의 투쟁에 밀려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다 학살론이 다시 주목을 받게되는 계기는 1990년대 접어들면서 항쟁론과 폭동론의 담론적 효과를 재생산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부터이다(고성만 2005, 356). 앞서 간략하게 논한 바와 같이 4.3의 의례 공간에서 항쟁론과 폭동론은 매해 투쟁을 반복해왔고, 그 현장은 전장을 방불케 했다. 이러한 대립이 거듭되자 4.3에 대한 부정적 도민여론이 확산된다. 또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권의 과제가 ‘역사 바로 세우기’로 설정되고, 민선 지자체장 선거가 실시되며 정치적 지형에도 변동이 일어난다.

이러한 도민여론의 변화와 정치지각의 변동으로 항쟁론과 폭동론은 전략수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결국 담론지형의 변화로 인해 폭동론과 항쟁론은 모두가 4.3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제주도민의 단결과 화합이라는 공통



의 지향점을 설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양측이 ‘합동위령제’를 봉행하기로 합의한다. 결국 폭동과 항쟁으로 대립구도를 형성했던 두 담론이 마지노선을 양민학살로 설정함으로써 억울한 희생, 비운의 죽음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게 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진압 과정에서 폭력적 만행에 노출됐던 제주도민의 피해를 거론하고 담론으로서 양민학살의 사실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고성만 2005, 357).

따라서 양민학살론의 기억투쟁은 폭동론과 항쟁론의 지속적인 기억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담론의 정치·사회적 환경이 변화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양민학살론은 합의된 담론이라 표현할 수 있다. 양민학살론은 폭동론과 항쟁론의 담론환경에는 잘 대응하여 기억투쟁을 전개해나갔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사건에 대한 역사적 판단은 유보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양민학살론 담론은 4.19혁명 이후의 짧은 시간동안 대두되었던 양민학살론과 동일하다.



2.4 담론의 합의와 그 문제점

4.3은 한국 사회에서 망각되어야만 했던 사건이다. 냉전반공체제하에서 4.3은 국가에 대한 반란이자,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4.3에는 오직 폭도만이 존재할 수 있었다. 학살의 트라우마 그리고 연좌제의 공포 속에서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허용되었던 유일한 것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망각뿐이었다. 1978년 문학작품을 통해 4.3의 공론화를 시도한 작가 현기영이 겪었던 필화는 4.3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논의도 국가에 의해 금지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국가의 억압은 민주화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문민정부가 출범하기 이전까지도 국가보안법의 이름하에 4.3의 다른 연구자, 작가, 출판인 등이 구속되는 일이 이어졌다. 또 기대 속에 출범한 문민정부에서도 4.3의 진상규명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해야만 했다(김영범 2003, 81).

이처럼 문학작품에서 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4.3의 억압적 구조에 본격적인 균열이 일기 시작한 것은 앞서 논한바와 같이 1987년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이다. 학술성과와 문화운동의 결과물들이 응축되어 민중항쟁론이라는 대항기억이 부상한다. 민중항쟁론이란 항쟁의 지향점과 적극성 여부 등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 파악되기도 하지만(김민환 2012, 2014), 일반적 의미에서의 민중항쟁론은 그 1차적 목적을 공동체 수호와 유지에 두고 있는 저항운동으로 보는 시각이다. 민중항쟁론의 부상과 주목은 곧 공산폭동론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제주사회 내부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기억전쟁의 시작을 의미했다. 민중항쟁론의 부상으로 제주사회는 다시 공산폭동론과 민중항쟁론이라는 두 개의 기억으로 분열하게 된다. 두 기억의 주체들은 매해 위령제와 추모제라는 상이한 행사를 개최하며 반목을 거듭했다. 계속되는 갈등 속에 제주도내의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



고, 민선 지자체장 선거라는 정치적 지형 변화라는 상황이 겹치면서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분열과 갈등의 봉합지점을 모색하게 된다(고성만 2005, 352-356). 그 결과 두 기억의 합의점에서 다시 양민학살론이 주목받게 된다. 양민학살론이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을 전제로 삼고 국가폭력의 불법성과 잔혹성에 초점을 두는 시각이다(김민환 2012, 173; 조명기·장세용 2013, 211).⁵⁾

양민학살론이라는 기억의 부상으로 4.3의 기억지형은 크게 세 시기에 걸친 변화양상을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형은 1948년 사건발발로부터 권위주의 군사정권시기까지로 국가의 강요에 의해 오직 공산폭동이라는 기억만이 허용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4.19혁명 직후 짧은 기간 동안 양민학살론이 대두되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4.3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논의도 허용되지 않았다. 두 번째 지형은 1980년대 민주화 국면에서부터 2003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여전히 국가의 공식기억으로 공산폭동론이 존재하는 가운데, 민주화라는 전환국면 속에 민중항쟁론과 양민학살론과 같은 기억들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특히 민중항쟁론은 공산폭동론과의 치열한 기억투쟁을 전개했다. 4.3을 둘러싼 기억의 전쟁이 심화되어 제주사회 전체로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자 양측 모두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합의점으로서 양민학살론이 주목받기에 이른다. 마지막 시기는 2001년 제주4.3특별법 제정을 통해 2003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현재까지에 이르는 시기로 공산폭동론이 잔존하는 가운데, 법과 제도를 통해 양민학살론이 국가의 공식기억으로 자리잡아가는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5) 양민학살론이 분열과 갈등의 극복방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일부 학자는 양민학살이라는 명칭에는 토벌대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 중에는 양민이 아닌 사람들이 존재했지만(빨갱이), 대부분 희생자들은 '선량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며, 어떠한 측면에서는 논리적으로 폭동론을 강화하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김민환 2014, 79).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과거 공산폭동론이 국가 공식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던 시기와 현재 양민학살론이 국가 공식기억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시기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다. 공산폭동론이 4.3의 공식담론으로 작동하는 동안 그에 대한 여타논의는 억압과 탄압의 대상이었다. 마찬가지로 진상보고서가 발행되면서 과거와 같은 폭력적 방식에 의한 억압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언론과 연구들이 양민학살론의 토대 위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양민학살론으로의 합의는 중간적 단계이며, 양민학살론이 누리고 있는 제도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몇몇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공유되고 있지만(김영범 2004; 김민환 2014; 김평선 2015), 진상보고서 발간이후 4.3에 대한 논의는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이 그 동력을 상실하고 급격히 와해되었듯, 점차적으로 와해되어 가고 있다. 결국 4.3의 과거와 현재의 기억지형은 모두 기억을 선택적으로 수용·배제시킴으로써 현실을 재구조화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양민학살론의 대두는 4.3을 놓고 벌어진 제주도내의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분열을 일소시키고, 4.3의 제도화에 동력을 집중시키는 구심점으로 기능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4.3의 ‘진정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양민학살론으로의 합의와 그 토대 위에서의 진행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은 ‘미봉’의 해결책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미봉책’으로서의 합의는 4.3논의에 또 다른 장벽으로 세워지는 학습된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과거 4.3에 폭도만이 존재했던 것처럼 오늘날 4.3에는 오직 희생자만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역사의 반복 거듭됨을 목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민학살론으로의 합의는 누구를 위한 합의였는가라는 강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형적 합의는 어떠한 배경과 구조에서 가능했으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4.3이 해결되었다고 믿게 만들고 있는 하나의 ‘신화적’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또 이 신화는 가해자의 신화인가? 피해자의 신화인가?



IV. 외적요인 2: 정치경제적 요인

오늘날 4.3담론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4.3의 박제화 현상의 원인은 ‘양민학살론’으로의 담론합의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정치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분석은 이러한 담론합의가 제주 내부의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도의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화해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의 결과가 4.3논의의 장벽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볼 때 기존의 설명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이번 장에서는 정치경제적 요인을 주목하여 이 담론 합의의 배경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4.3의 기억투쟁과 공식담론의 변화는 정치·사회·경제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의 영향 아래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정치·사회·경제로 대표되는 담론의 외부환경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왔다. 기존 4.3연구들은 4.3이라는 사건자체에 주된 초점을 두다보니, 담론 분석에서 정작 한국사회의 현실과 제주4.3을 유리시켜 사고하는 오류를 범해왔던 것이다. 즉 이제까지의 4.3연구에서는 오직 4.3의 정치적 요인만이 고려되었던 경향이 강한 것이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을 위해 4.3의 기억투쟁이 활발해진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제주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한 서술은 당대적 맥락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당시의 언론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언론자료를 통해 민주화 이후 제주에서 4.3의 기억투쟁이 전개되는 담론의 외부환경으로서 경제적 상황은 어떠했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제주는 정치적 지형의 변동과 더불어 경제적 지형의 변동도 경험하게 된다. 지금까지 4.3의 담론분석과 기억투쟁과정에서 간과되어 왔던 당시의 경제적 지형변동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1절 복합적 위기의 중첩

1987년 이후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제주사회가 직면하게 된 첫 번째 위기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조치였다. 1983년부터 해외여행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기 시작한 정부는 1989년 해외여행을 전면 자유화한다.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로 당시 제주도가 직면하게 된 상황은 당시의 언론 기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992년 『여행신문』 창간호에는 ‘해외 신혼여행 강풍에 제주도 휘청’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 따르면 약 40만 명의 신혼부부 중 해외여행자는 5%정도 선으로 전체 해외여행자가 국민의 4% 수준인 것에 비해 높아지는 추세라며 제주도 관광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행신문 1992/7/10). 그리고 몇 해 뒤 제주대 허향진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의 제주도의 관광정책이 ‘앉아서 편하게 고객을 받는 형태’였음을 지적하며,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 전략을 통해 관광위기를 타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동아일보 1996/5/25). 1989년 이전까지는 신혼여행을 비롯한 국내 관광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제주도는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로 첫 번째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위기는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이다. 1986년 시작된 이 협상은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의 예외 없는 관세화, 즉 관세만 내면 정부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농축산물의 수입이 가능한 농축산물의 자유무역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협상 당시 국내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자체에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협상이 진척되면서 쟁점이 된 것은 어떠한 농산물이 자국의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의 이유로 수입 개방을 제한할 수 있는 NTC품목이 될 것인가였다.

1989년 4월 8일 정부는 농축수산물 82개 품목을 개방하고, 1991년까지



243개 품목을 개방한다고 발표한다. 당초 농축산물 개방 품목은 180~190개 수준이었지만,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의 압박으로 인해 265개 품목으로 개방 품목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수입 개방 품목에 유채와 바나나, 키위가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이 세 가지 작물은 당시 제주도 농가 4만 2천 7백 가구 중에서 유채가 2만 농가, 바나나 1천 5백 농가, 키위 3백 농가로 총 2만 1천 8백 농가가 개방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로 전체 제주도 농가의 절반이 넘는 규모이기에 제주 농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동아일보 1989/4/8).

1990년 1차 개방대상 품목인 제주도산 바나나가 개방을 앞두고 수입품과 가격경쟁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농가 도산이 예측되자, 이러한 불안감은 파인애플, 감귤 농가 등으로 확산된다(경향신문 1990/8/15). 몇 달 뒤 농림수산부가 감귤을 NTC품목에서 제외시킨다고 발표하자, 감귤 농가의 불안감은 현실화되고 제주 농가들은 크게 반발한다. 제주 농가들의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NTC품목을 감귤을 포함하여 9개에서 15개로 확대하여 GATT에 제출하게 된다(연합뉴스 1990/10/22).

하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 협상에서 예외 없는 관세화에 반대하던 일본 등이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최종적으로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은 완전개방대상으로 선정된다. 제주 농가는 감귤이 NTC품목에 포함되었다는 잠시간의 안도감을 뒤로하고 다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감귤시장의 완전개방은 제주 사회 전체의 경제적 위기를 의미했다. 왜냐하면 1991년 제주 지역 전체 농업 소득 가운데 감귤 농가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6천 3백 55억의 67%인 4천 2백 51억이었으며, 제주 총생산액의 20%를 감귤 농가 소득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허호준 1993, 13).

이러한 위기와 혼란이 더욱 가중된 것은 앞선 1차 농산물 개방 이후 정부는 바나나와 파인애플 농가들을 일찍이 감귤 작목 농가로 전화를 유도했다(매일경제 1990/9/4). 따라서 제주 농가에서는 감귤 작목은 NTC품목에 포함될 것이라



는 기대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NTC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 되었던 감귤의 수입 전면 개방은 혼란을 가중시켰고, 제주의 위기 상황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89년 여행자유화조치 그리고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제주도는 양축을 이루는 관광산업과 감귤농가의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경제적 동력을 상실한 제주사회의 주된 관심사는 제주도의 새로운 경제적 동력 확보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주도 개발 논의가 주목받게 된다.

정부는 1991년 제주개발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개발법의 시초는 1990년 정부에서 구상한 제주도의 개발 모델인 ‘하와이형’ 개발구상에 있다. 이 구상은 1991년 종료되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이어 1992년부터 10년 동안 제2차 종합 개발을 추진시켜 갖가지 위락시설을 집중 건설한다는 것이 주요한 골자였다(한겨레 1990/03/06, 2). 이 계획은 같은 해 7월 정부와 민자당을 중심으로 제주도개발 특별법이 추진되면서 구체화 된다. 하지만 제주개발특별법이 재벌들을 위한 조처라는 인식이 제주사회에 확산되면서, 제주도민은 환경 보전론과 도민 이익 확보를 주장하며 범도민적으로 개발 반대운동을 전개한다. 급기야 1991년 제주개발 특별법에 반대하는 시민이 분신자살하게 되고, 제주특별법 반대 운동은 더욱 격렬해진다(한겨레 1991/11/08, 1).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민자당)은 국회 건설위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제주사회는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날치기 통과라며 규탄한다(한겨레 1991/11/27, 14).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된 1992년 지방선거에서 제주개발특별법을 반대하는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자, 제주개발특별법 개정은 다시 쟁점화 된다. 경제적 위기가 가중된 상태에서 제주도민들이 개발에 격렬히 반대했던 이유는 개방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개발로 인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까지 파괴될 것이라는 심리와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앙 하향식 개발에 대한 반발이었기 때문이다(김종배 1991).



하지만 제주의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환위기까지 닥치면서 이러한 갈등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외환위기로 제주 사회는 물론 한국사회 전체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제주도 개발은 필수적인 것이며, 제주 사회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구상해야만 했다.



제2절 위기의 타개책: '세계 평화의 섬' 구상과 4.3

복합적 위기가 중첩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1년 4월 한·소 정상회담의 개최지로 제주도가 선정되었고, 고르바초프의 제주 방문은 제주도에는 새로운 기회로 여겨졌다. 고르바초프의 방문을 시작으로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갈구하기 시작한다.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2000년도와 2015년에 각각 발간한 공식자료에도 평화의 섬의 출발점을 한·소 정상회담에 두고 있다(제주발전연구원 2000; 제주특별자치도 2015). 고르바초프의 방문을 통해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구축하려고 한 제주도의 시도는 당시 제주도가 처한 위기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절실함은 당시 제주도의회의 움직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고르바초프 방문 5개월이 지난 후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채택한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내외분께 보내는 메세지」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은 세계평화의 전령으로 우리 고장을 찾아주셨던 각하께 제주도민들의 따뜻한 우의와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 이로 인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냉전체제가 화해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제주는 「세계 속의 평화의 섬」으로 떠올랐습니다. (……) 얼마 전 소련사태 당시 우리 도민들이 누구 못지않게 각하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신변의 안전을 걱정했던 것도 바로 평화를 사랑하는 각하와 한국, 그리고 우리 제주인과의 각별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이 메세지는 52만 제주도민의 기쁨과 우리 한반도에도 통일의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라는 염원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부디 보람찬 한·소 선린관계의 바탕위에 삼성신화로 열린 우리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오래오래 기억하시길 바라오며, 각하 내외분의 건승과 소련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제주도의회 1991, 제



66회 회의록).

해외여행자유화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위기에 직면한 제주도로서는 고르바초프의 방문이 하나의 복합적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평화'라는 이미지는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적절한 제주의 미래 모델로 여겨졌던 듯하다. 1992년 제주도의회 도정보고에서의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박병련의 보고는 이러한 당시의 제주도의 현실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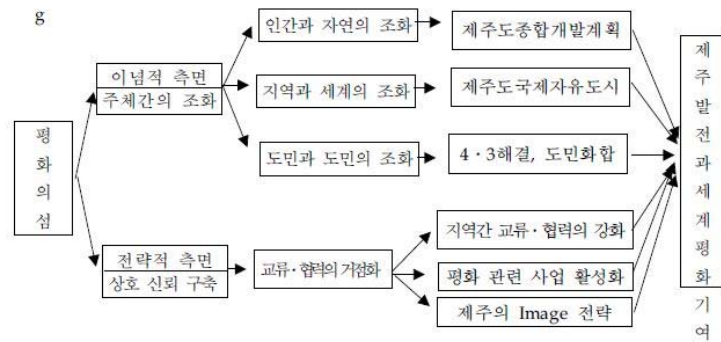
21세기 태평양권의 주도 역할을 담당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수려한 자연경관, 관광자원을 구비한 자랑스러운 땅 제주도는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수려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보전 계승하고 산업간 조화 발전으로 고소득 지역경제를 실현하며 국제적 안목을 갖춘 진취적 도민의식을 함양하여 태평양권 제일의 국제관광지로 환상의 섬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제주도의회 1992, 제70회 회의록).

1991년을 기점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제주 관광업의 위기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시작된 박병련 실장의 도정보고에는 관광업의 위기는 물론이고 개발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제주 내부의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잘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는 고르바초프 방문이후 지속적으로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도지사의 도정연설과 도의회의 개회사에서도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수사적으로 등장했다. 그 결과 제주도는 평화의 섬 이미지에 걸맞게 1996년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을 연달아 개최한다.

하지만 이 평화의 섬 구상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는 고르바초프 방문이



후 몇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사실만으로 ‘세계 평화의 섬’으로 명명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1999년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양우철이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점을 지적했고, 기획관리실장 김한옥은 세계 평화의 섬 구상이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 있음을 인정하며, 외국 정상들이 많이 다녀감으로써 동서 냉전이 없어지는 데 제주도가 많이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하자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제주도의회 1999, 제149회 회의록).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세계 평화의 섬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1999년까지 제주도는 평화의 섬에 대해 구체적인 이미지와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섬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평화적 이미지를 구축을 위해 산재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동원해야했고, 이 과정에서 세계 평화의 섬 구상과 제주 4.3사건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림 1> 제주 평화의 섬 개념도(제주개발연구원 2000)

<그림 1>은 제주개발연구원이 2000년 정책보고서에 수록된 제주 평화의 섬에 대한 개념도이다. 이 개념도를 살펴보면 평화의 섬이라는 큰 구상 속에 도민과



도민의 조화의 일환으로 4.3이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제주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구조가 구축되어 있다. 즉 평화의 섬을 위해서 4.3 문제가 해결되어야하며, 평화의 섬 구상이 도민들 간의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4.3문제는 평화의 섬 구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평화의 섬에 대한 개념 정립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제주도는 평화의 섬 구상이 제주개발특별법에 포함되면서, 몽고항전을 비롯해 4.3사건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모든 역사를 동원해 평화의 섬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평화의 섬 구상과 제주 4.3사건은 상호 결합이 가능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또 이러한 결합은 4.3의 담론 재구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제3절 포섭된 기억과 그 결과

이번 절에서는 세계 평화의 섬 구상과 4.3의 결합이 담론 재구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 본바와 제주도의 세계 평화의 섬 구상은 그 실체가 불분명했고, 그 실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4.3을 비롯한 여러 제주의 기억들이 사후적으로 동원된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세계 평화의 섬과 4.3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세계 평화의 섬 구상 즉, 제주 개발 문제와 4.3은 원래 분리된 문제였다. 4.3은 정치적 성격의 문제였고, 평화의 섬은 제주가 처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제주 개발의 일환으로 파생된 경제적 성격의 문제였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공간에 있던 두 문제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평화의 섬 구상과 4.3이 만날 수 있었던 지점은 제주도의 ‘수난’이라는 지점이었을 것이다. 제주도는 정치·경제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소외되어온 공간이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육지와 단절된 공간이라는 점 외에도 다른 문화와 언어로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질적인 공간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기에 평화의 섬 구상과 4.3은 각각 제주도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수난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해외여행자유화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촉발된 경제적 위기와 제주도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자행된 대규모의 학살과 억압은 제주가 겪어온 ‘수난’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 수난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제주도의 억압적 역사를 상징하는 4.3의 기억을 동원하는 동시에, 4.3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제주 내부의 갈등을 일소시켜야만 했다. 왜냐하면 평화라는 이미지와 갈등은 공존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의 섬 구상을 위해 4.3의 기억을 포섭해야만 했다.

하지만 ‘수난’이라는 접점을 중심으로 제주도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고안된 평화의 섬의 구상과정에서 4.3의 포섭은 의도하였던, 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4.3논의를 다시 주변화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다면 평화의 섬 구상의 어떠한 문제가 결과적으로 4.3을 주변화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일까? 이를 위해서는 평화의 섬 구상에서의 ‘평화’의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공식보고서에서 평화의 섬 구상에 있어서 평화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제주 개발의 기본 정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평화의 개념은 제주 평화의 섬 구상에서 평화의 개념은 **주체간의 갈등과 대립이 없이 조화로움이 구현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우며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지역과 중앙 그리고 세계와 조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제고, 도민간의 역기능적 갈등이 극복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되는 지역복지 공동체 구현 등으로 제주발전의 기본정신이 되어야 한다(제주발전연구원 2000, 2).

제주 평화의 섬 구상에서는 제주 개발을 위해 주체간 갈등과 대립이 없는 조화로움이 구현되는 것을 평화로 정의하고 있다. 갈등과 대립이 없는 상태가 평화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인가?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조화만이 추구되는 상태는 평화보다는 ‘통제’라는 개념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제주 평화의 섬 구상에 나타나고 있는 평화라는 이미지는 과연 평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제주 개발을 위해 고안된 ‘통제’의 장치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은 제주발전연구원의 공식보고서에서 외국의 국제화와 평화의 사례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조를 통해 더욱 강화된다. 제주발전연구원은 평화의 섬 구상에 있어 외국의 사례로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핵화



와 평화도시 정책을 참조하고 있다(제주발전연구원 2000, 24-28).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도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평화담론을 벤치마킹(bench marking)의 대상으로서 참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사례의 참조를 통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유익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평화담론은 과거를 대면하는 방식에 있어서 1980년대 독일사회에서 나타났던 '상대화로서의 정상화'라는 성격이 짙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평화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평화의 장막 속에 전쟁 범죄를 은닉시켰고, 스스로를 전쟁이 낳은 피해자와 희생자로 재위치 시켰다. 평화의 도시를 표방하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어디에서도 왜 전쟁이 발생했으며, 전쟁으로 인해 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을 치루게 되었고, 이러한 전쟁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라는 성찰은 실종되어있다. 즉 전범국 일본으로서의 전쟁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으며, 모두가 전쟁에 의한 피해자이자 희생자라는 공허한 평화만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채우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이러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부정적인 과거와의 대면을 참조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비판적 참조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평화 이미지를 구축했는가, 아니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사례를 답습했는가?

제주 평화의 섬 구상은 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슬픈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다. 4.3은 이데올로기 대립에 기인한 3만에서 8만의 사상자를 낸 비극이다. 이 비극은 여전히 생생하게 대부분의 제주인에게 기억되고 있다. 그 비극적 사건에 대한 기억은 제주인에게 이데올로기 대립의 초월과 유혈 갈등의 재발을 막는 평화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유산과 역사적 경험으로 인한 영향이 제주인에게 평화의 사상을 깊이 간직하게 하였다. 제주인은 평화를



실현해야 하며 평화로운 자치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제주발전연구원 2000, 16).

제주도는 제주4.3특별법에 따라 4.3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기 이전인 2000년부터 평화의 섬 구상 속으로 4.3의 기억을 포섭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평화의 섬 그 자체로는 당위성이 부족했기에, 4.3을 포섭함으로써 평화의 섬의 당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평화의 이미지를 제주 개발의 전면에 내세운 제주도에게 4.3을 두고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은 평화의 구상을 저해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따라서 4.3은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탈색시키고 희생과 수난의 역사로 재구성되어, 평화의 섬 구상의 빈공간을 메워야만 했다.

그 결과 4.3은 다시 한국 사회에서 주변화 되었고, 이후의 진상조사와 진상보고서의 내용이 양민학살론에 기초한 수난사적 시각으로 합의되는데 강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제주도를 중심으로 평화의 섬 이미지에 포섭된 4.3이 다른 해석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갈등을 야기 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의 섬 구상이 제주도의 화합을 통한 복합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선택이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제주도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부정적 과거와의 대면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되었다.



V. 결론을 대신하여

이 글은 4.3의 제주4.3의 담론 재구성 과정을 주목하고, 4.3의 담론이 어떠한 외적요인에 의해 재구성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시도했던 작업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본 연구가 출발한 기억연구에 대한 개괄을 설명하고, 이것에 근거하여 과거의 기억이 재구성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고찰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기억의 재구성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기억을 재현시키는 사회적 틀과 그것이 형성되는 구성원들 간의 매개물을 중심으로 한 접촉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전제들을 바탕으로 제3장과 4장에서는 4.3의 담론 재구성 과정에 영향을 끼친 외적요인들인 정치·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대해 분석을 시도했다. 먼저 정치·사회적 요인에서 냉전반공체제의 형성과 민주화라는 정치·사회적 환경변화는 폭동론과 항쟁론이라는 4.3의 기억을 형성·재현시키는 주요한 요인 되었다. 하지만 정치·사회적 요인은 폭동론과 항쟁론이 공식담론화와 재현은 설명할 수 있었지만, 학살론의 주목과 공식담론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경시되어온 경제적 요인을 통하여 학살론으로 합의가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4.3논의를 두고 폭동론과 항쟁론을 중심으로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던 당시, 경제적으로는 제주도는 세계화와 농산물시장 개방이라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는 위기의 타개책으로 ‘평화의 섬’이라는 개발 모델을 구상을 고안해낸다. 하지만 평화의 섬이라는 구상은 불분명한 실체로 인해 국내외적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도에 산재되어 있는 기억들을 동원하여 평화의 섬 구상을 완성해나간다. 이 과정에서 4.3은 제주도민의 억압과 수난의 상징으로써 평화의 섬 구상에 동원된다. 4.3이 평화의 섬 구상에 포섭됨에 따라 이후 진행된 4.3의



진상규명작업과 진상보고서 작성은 평화의 섬 구상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4.3의 담론 분석에 있어 그동안 정치적 요인에만 함몰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4.3을 보다 현재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4.3의 담론변화과정에서의 다양한 요인들, 그 중 특히 정치경제적 변화가 고려되어야함을 시사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는 4.3담론 분석의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필자의 부족한 역량으로 몇 가지 후속연구 과제를 남겨두게 되었다. 먼저 정치사회적 요인을 통한 담론 분석에 있어서 담론들 간의 역동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4.3의 담론과 기억들이 경합하며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보다 정교한 설명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두 번째로 양민학살론으로의 합의와 제주 평화의 섬 구상과의 결합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포착해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평화의 섬과 4.3과의 결합과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 역시 인터뷰와 구술자료 활용을 통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 사회와 그 피해자들이 폭도와 빨갱이로 매도되어 온 약 반세기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불과 10여년 사이에 제주4.3의 기억은 다시 국가에 의해 재구성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4.3을 놓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이미 조사과정에서부터 예견된 일이었을 것이다. 조사과정에서도 조사내용의 편향성을 문제 삼은 균경측 위원이 사퇴를 하고, 이에 따라 조사보고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후에서야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제주4.3을 두고 논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제주 4.3에 대한 논의는 과거 공산폭동론이 공식담론이자 지배적 담론으로 작동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학살이라는 기억 외의 4.3에 대한 다른 기억들은 망각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앞선다.



국가에 의해 다시 4.3사건의 공식담론이자 기억으로 규정된 양민학살론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폭력에 의한 객체로서의 양민 희생자만이 기억될 뿐, 사건의 가해자와 양민학살론 이외의 사건에 대한 다른 해석은 망각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갈등 봉합을 위해 대승적 전략으로 학살과 희생의 측면만 부각시켰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기에 제주4.3에 대한 논란과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4.3사건은 과연 양민학살론이라는 단일한 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사건인가. 또 양민학살론 이후의 4.3의 담론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는 4.3을 ‘어떻게’ 기억해야할 것인가.



【참고문헌】

- 강창일. 2001. “제주4.3 진상규명운동과 한국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인권』 제1권 1호, 105-139.
- 강창일·현혜경. 2004. “기억투쟁과 4.3위령의례.”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편. 『제주4.3연구의 새로운 모색』, 69-96.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 강혜경. 2005. 『제1공화국 초기 국민통제의 확립』. 파주: 한국학술정보.
- 경향신문. 1948. “제주도에 또 좌익폭동.” 『경향신문』 (4월 7일).
- 경향신문. 1949. “제주도 사태는 긴급 민국당서 수습촉구.” 『경향신문』 (3월 12일).
- 경향신문. 1990. “제주 바나나 벼랑에 서다.” 『경향신문』 (8월 15일).
- 고경민. 2013. “제주4.3진상규명운동의 성과와 과제.”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편. 『제주4.3연구의 새로운 모색』, 72-105.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 고명철·김동윤·김동현. 2017. 『제주, 화산도를 말하다』. 서울: 보고서.
- 고성만. 2005. “제주 4.3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4.3과 역사』 제5호,



346-372.

고성만. 2011. “4.3과거청산과 ‘희생자’.” 『탐라문화』 38권, 249-277.

고진, 가라타니 저·송태욱 역. 2001. 『윤리21』. 서울: 사회평론.

권귀숙. 2006. 『기억의 정치』. 서울: 문학과지성사.

김동윤. 2003. 『4.3의 진실과 문학』. 제주: 도서출판 각.

김동윤. 2004. “4.3문학의 전개와 그 의미.” 전남대5.18연구소·제주4.3연구소 편.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210-252. 서울: 역사비평사.

김민환. 2003.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김진균 편.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2』, 399-416. 서울: 문학과과학사.

김민환. 2012. “동아시아의 평화기념공원 형성과정 비교연구: 오키나와, 타이페이, 제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민환. 2014. “전장(戰場)이 된 제주4·3평화공원: 폭동론의 ‘아른거림(absent presence)’과 분열된 연대.” 『경제와사회』 통권 제102호, 74-109.

김성례. 1999. “근대성과 폭력: 제주 4.3의 담론정치.”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제주4.3연구소·한국연사연구회 편. 『제주4.3연구』, 242-267. 서울: 역사비평사.



- 김성희·이덕형. 2005. “역사의 정상화, 국가의 정상화-독일 ‘역사가 논쟁’(1986)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29권, 1-22.
- 김영범. 1998. “집합기억의 사회사적 지평과 동학.” 지승종·박영은·박명규·김경일 편. 『사회사연구의 이론과 실제』, 157-211.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영범. 1999. “알박스(Maru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6집 제3호, 577-594.
- 김영범. 2003.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 『민주주의와 인권』 제3권 2호, 67-104.
- 김영범. 2004. “기억투쟁으로서의 4.3문화운동 서설.” 전남대5.18연구소·제주4.3연구소 편.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26-68. 서울: 역사비평사.
- 김유경·최외선·김갑숙. 2012. “제주4.3생존자의 트라우마와 미술치료적 접근.” 『미술치료연구』 제19권 제3호, 537-563.
- 김종배. 1991. “제주개발특별법 파동의 진상.” 『월간 말』 11월호, 165-169.
- 김평선. 2015. “제주4.3의 정치적 원인.” 『4.3과 역사』 제14호, 217-255.
- 나간채. 2004. “문화운동연구를 위하여.” 전남대5.18연구소·제주4.3연구소 편.



-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11-25. 서울: 역사비평사.
- 노라, 피에르 저·김인중·유희수·문지영 역. 2010. 『기억의 장소』. 서울: 나남출판.
- 대통령비서실. 2004.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 동아일보. 1949. “제주도 반란 해결을 요청.” 『동아일보』 (3월 12일).
- 동아일보 1989. “개방 폭 커 후유증 우려.” 『동아일보』 (4월 8일)
- 동아일보. 1996. “공격적 관광유치전략만이「위기」타개책.” 『동아일보』 (5월 25일).
- 매일경제. 1990. “제주도개발 특별법 추진.” 『매일경제』 (7월 25일). 2.
- 매일경제. 1990. “농촌 구조 근본적 개선 역점 UR대책 10개년 계획의 의미.” 『경향신문』 (9월 4일).
- 박명림. 1988.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서동. 1990. 『영원한 우리들의 아픔 4.3』. 제주: 월간제주관광.
- 박재영·김영란. 2009. “독일의 과거극복, 어디까지 왔나?.” 『동학연구』 제26집, 115-140.



- 박찬식. 2003. “4.3 진실찾기 운동의 발자취.” 『4.3과 역사』 제3호, 34-44.
- 박찬식. 2004. “4.3을 통해 본 과거청산의 바람직한 방향.” 『4.3과 역사』 제4호, 155-177.
- 박찬식. 2007. “4.3의 공적 인식 및 서술의 변천.” 『한국근현대사연구』 41권, 170-197.
- 박찬식. 2007. “제주4.3사건 관련 목포형무소 재조사 연구.” 『역사학연구』 제30집, 147-183.
- 아라리연구원. 1988. 『제주민중항쟁』. 서울: 소나무.
- 아스만, 알라이다 저· 변학수·채연숙 옮김. 2011. 『기억의 공간』. 서울: 그린비.
- 야스퍼스, 카를 저·이재승 역. 2014. 『죄의 문제』. 서울: 도서출판 앨피.
- 이재승. 2008. “기억과 법: 홀로코스트 부정.” 『법철학연구』 제11권 제1호, 223-252.
- 양재혁. 2017. “‘기억의 장소’ 또는 ‘망각의 장소.’” 문화사학회 엮음. 『기억은 역사를 어떻게 재현하는가』, 15-40. 파주: 한울아카데미.
- 양점심. 2000. “제주 4.3 특별법과 양민학살 담론,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연



구』 7호, 271-282.

양정심. 2006. “배제된 기억-제주 4.3항쟁의 역사.” 『4.3과 역사』 6권, 55-73.

양조훈. 2013. “제주4.3위원회의 활동성과와 평가.” 제주4.3연구소 학술대회. 제주. 10월.

양한권. 1988.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여행신문. 1992. “해외 신혼여행 강풍에 제주도 휩청.” 『여행신문』 (7월 10일).

연합뉴스. 1990. “輸入개방 例外 15개 品目으로 확대.” 『연합뉴스』 (10월 22일).

오윤석. 2004. “제주4.3사건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법학연구』 15권 1호, 299-331.

올릭, 제프리 저·강경이 역. 2011. 『기억의 지도』. 서울: 옥당.

육영수. 2014. “역사, 기억과 망각의 투쟁.” 『호모메모리스』, 240-261. 서울: 책세상.

이성우. 2011. “국가폭력에 대한 기억투쟁.” 『OUGHTOPIA』 제26권 1호, 63-86.



- 이재승. 2004.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평가.” 『민주법학』 25권, 481-502.
- 이재승. 2008. “기억과 법: 홀로코스트 부정.” 『법철학연구』 제11권 제1호, 223-252.
- 이재승. 2014. “국가범죄와 야스퍼스의 책임론.” 『사회와 역사』 101권, 183-217.
- 이진우. 2014. “기억의 병과 망각의 덕.” 『호모메모리스』, 16-37. 서울: 책세상.
- 임성모. 1999. “기억의 내전: 세기말 일본의 자화상.” 『당대비평』 제8호, 378-399.
- 임지현. 2016. “전지구적 기억공간과 희생자 의식.” 『대구사학』 125권, 385-417.
- 장혜원·김태훈·정철. 2011. “다크투어리즘 참가자의 방문동기.” 『관광학연구』 제35권 6호, 79-97.
- 전진성. 2003. “어떻게 부담스런 과거와 대면할 것인가?-과거극복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독일연구』 제6호, 133-157.
- 전진성. 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서울: 휴머니스트.



- 전진성. 2006. “기억의 정치학을 넘어 기억의 문화사로: ‘기억’연구의 방법론적
진전을 위한 제언.” 『역사비평』 통권76호, 451-483.
- 정근식. 2010. “민주화와 이행기 정의 또는 복합적 과거청산.” 제주4.3연구소
편. 『한국의 과거사 청산과 민주화』, 13-37. 제주: 제주4.3연구소.
- 정근식. 2013.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억 연구의 귀적.” 『민주주의와 인권』 제13
권 2호, 347-394.
- 정근식. 2014.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억 연구, 그 귀적을 따라서,” 『호모메모리
스』, 284-313. 서울: 책세상.
- 정인모. 2004. “과거극복과 회상의 미학.” 『독어교육』 제30집, 437-459.
- 제민일보 취재반. 1993. 『4.3은 말한다』. 서울: 전예원.
- 제주도의회. 1991. 제66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9월 18일.
- 제주도의회. 1992. 제70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1월 27일.
- 제주도의회. 1999. 제149회 제4차(폐회중) 제주도종합발전지원법(안)심사특별위
원회 회의록. 5월 19일.
- 제주발전연구원. 2000. 제주형 ‘평화의 섬’ 모형 정립과 실천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2015.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백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서울: 제주4.3사건지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연구소. 1989. 『이제사 말함수다』. 서울: 한울.

제주4.3평화재단. 2017. 『어둠에서 빛으로』. 제주: 제주4.3평화재단.

조명기·장세용. 2013. “제주 4.3사건과 국가의 로컬기억 포섭 과정.” 『역사와 세계』 제43집, 205-235.

참포니, 시모네타. 2006. “이야기꾼과 지배서사: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근대성, 기억, 역사.” 올릭, 제프리 편·최호근·민유기·윤영휘 역. 『국가와 기억』, 59-90.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최호근. 2005. 『제노사이드-학살과 은폐의 역사』, 서울: 책세상.

코니, 프레데릭. 2006. “대사건을 다시 생각하기: 기념사업으로서의 10월 혁명.” 올릭, 제프리 편·최호근·민유기·윤영휘 역 『국가와 기억』, 33-58.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카, 위르겐. 2004. “불편한 과거사의 처리: 1945년 및 1990년 이후 독일의 집단기억과 정치.” 『독일연구』 제7호, 113-131.



- 타카하시 테츠야. 1999. “부정론의 시대.” 코모리 요우이치·타카하시 테츠야 편·이규수 역.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 260- .서울: 삼인.
- 표인주·염미경·박정석·윤형숙·김동춘·김용의·김봉중·김경학. 2003. 『전쟁과 사람들』. 파주: 한울아카데미.
- 한겨레. 1989 “농축수산물 82개품목 올해 개방.” 『한겨레』 (4월 9일).
- 한겨레. 1990. “제주도 ‘하와이형’ 개발.” 『한겨레』 (3월 6일), 2.
- 한겨레. 1991. “제주개발 특별법 반대 분신사망.” 『한겨레』 (11월 8일), 1.
- 한겨레. 1991. “제주도민 우롱 날치기 통과 규탄.” 『한겨레』 (11월 27일), 14
- 한겨레. 1993. “감귤수입개방 반대 운동 시민·학생들지지 잇따라.” 『한겨레』 (11월 23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문 해설』.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성훈. 2018. 『학살, 그 이후 삶과 정치』. 서울: 산처럼.
- 허상수. 2003. “정부보고서 확정 이후 제주4.3운동의 방향과 과제.” 『4.3과 역사』 제3호, 322-336.



- 허상수. 2004. “제주4.3사건의 진상과 정부보고서의 성과와 한계.” 『동향과 전망』 제61호, 176-228.
- 허시, 허버트 저·강성현 역. 2009.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서울: 책세상.
- 허호준. 1993. “우루과이 태풍 근접 경보 제주 굴 벼랑…거센 반발.” 『한겨레』 (11월 13일), 13.
- 허호준. 2004. “제주 4.3항쟁과 제노사이드.” 『4.3과 역사』 제4호, 178-215.
- 허호준. 2013. “제주 4.3연구의 새로운 모색.”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편. 『제주4.3연구의 새로운 모색』, 19-53.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 홍순권. 2016. “‘과거사’의 진실 규명과 역사교육.” 『역사연구』 30호, 185-199.
- Adorno, Theodor. 1986. “What Does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Mean?” in Geoffrey H. Hartman ed. *Bitburg in Moral and Political Perspective*(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Lind, Jennifer. 2008. *Sorry States: Apologies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Berliner, David. 2005. “The Abuses of Memory: Reflection on the Memory Boom in Anthropology.” *Anthropological Quarterly* 78(1): 197-211.



Burke, Peter. 1989. "History as Social Memory." In *Memory: History, Culture and Mind*, edited by Thomas Butler, 77-96. New York: Basil Blackwell.

Halbwachs, Maurice. 1980. *The collective Memory*. tr. by Francis J. Ditter. and Vida Yazi Ditter. New York: Harper& Row.

Halbwachs, Maurice. 1992. *On Collective Memory*, ed. and tr. by Lewis A. Cos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dorno, Theodor. 1986. "What Does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Mean?" In *Bitburg in Moral and Political Perspective*, edited by Geoffrey H. Hartma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Berliner, David. 2005. "The Abuses of Memory: Reflection on the Memory Boom in Anthropology." *Anthropological Quarterly* 78(1): 197-211.

Burke, Peter. 1989. "History as Social Memory." In *Memory: History, Culture and Mind*, edited by Thomas Butler, 77-96. New York: Basil Blackwell.

Klein, Kerwin. 2000. "On the Emergence of Memory in Historical



Discourse.” Representation 69: 127-150.



Abstract

A Study on Reconstruction Progress of Discussion on Jeju 4.3 Incident: Focusing on External Factors

This study focuses on reconstruction process of discussion about Jeju 4.3 Incident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discussion on Jeju 4.3 Incident has been reconstructed by external factors. Jeju 4.3 Incident occurred in Jeju Island 70 years ago. The discussion on referring the incident as riot, resistance movement, and massacre continued among repeated political changes. Currently, the incident is politically settled as 'Jeju 4.3 Incident'. Then, how did the discussion on 4.3 reconstructed and how massacre has been agreed as 'incident'?

To answer those questions, this study analyzed Jeju 4.3 Incident by dividing external factors in reconstruction process into sociopolitical element and economic element. In sociopolitical element, the 4.3 involved discussion on riot and resistance movement based on change in sociopolitical environment such as formation of cold war against communism system and democratization. However, although discussion on riot and resistance movement explain official discourse and reproduction, they have limit in focusing on massacre and process of official discourse. Thus, this study used economic element which has



been neglected in the past and analyzed how agreement has been made as massacre. When political conflict intensified over whether 4.3 was riot or resistance movement, Jeju Island was in complex crisis of globalization and opening of agricultural product market. In such situation, Jeju Island devised development model named 'Island of Peace' as the solution for crisis. However, 'Island of Peace' was not convincing enough in Korea and overseas due to unclear substance. In response, Jeju Island utilized memories of Jeju Island and completed plan for 'Island of Peace'. In such process, 4.3 was involved in 'Island of Peace' plan as the symbol of suppression and suffering of Jeju Island residents. As 4.3 was involved in the plan, the inspection on 4.3 and report about 4.3 took place in the frame of plan for 'Island of Place'

Key Word : Jeju 4.3 Incident, Memory, Discussion, Peace, Development, Island of Peace

